

03

제 1 토 론

사회적경제기본법에 관한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입장

이인경(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사무국장)

사회적경제기본법에 관한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입장

이인경(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사무국장)

1. 들어가는 말

사회적경제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폐해인 양극화와 빈곤의 문제, 고용없는 성장 등 경제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경제조직의 가치지향적인 경제활동이다. 사회적경제는 지역사회안에서 제반 경제조직 및 사회조직간의 연대와 협동, 정부와 민간의 가치중심적 활동과 지원을 기반으로 성장한다.

이 같은 내용을 기본으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성, 지속가능성, 자발성, 연대성이 발휘되어야 하며, 정부와 민간의 역할과 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본 틀이 바르게 마련되어야 한다.

지난 IMF 이래로 시민사회와 사회적경제 부문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이라는 개별법의 지원체계하에서 수많은 정책집행의 시행착오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공동체의 재구성이 사회적경제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왔다.

최근 국회차원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고, 관심을 표명하는 것은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성과와 경험이 한국사회의 다기 다양한 경제사회문제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 나갈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회안에서 작동하는 정당 간 정치적 이해관계의 산물일수도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입법화가 급물살을 타고 진행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조직간 연대체계가 구축되지 못한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어 현장조직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2.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한 한기협의 입장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이하 한기협)는 고용노동부가 관할하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주요기조가 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정부 부처 간 정책통합성 실현과 거버넌스를 기본으로하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한바 있다.

정부의 사회적기업 정책은 성장단계, 사업모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의 수단으로서 사회적기업의 숫자를 늘리는 정책을 정부주도하에 추진하여 사회적기업의 목적 실현 활동을 오히려 제약하고 있다고 문제제기해 왔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이와 같은 개별법 하에서의 행정지원의 시행착오와 오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주요기조는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조직 활동의 자발성,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을 목표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효과적으로 공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한기협은 최근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화 추진을 둘러싼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사회적기업은 물론 사회적경제조직간의 협력과 연대의 기반을 구축하지 못한 상황에서 추진됨으로써 연대성과 협동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 우려하며, 민간차원의 사회적경제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응전략을 논의하고,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 하였다.

민간차원의 사회적경제위원회는 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에 포함된 경제조직은 물론 연대회의에 소속되지 않은 중간지원 조직을 포괄하여 확대된 형태의 논의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의 정책이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며 다만,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이를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들을 확대하기 위해 현장조직의 이해와 경험, 협력모델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한다.

3. 새누리당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한 한기협의 입장

새누리당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경제를 법률로서 호명한다는 점, 개별 법률로 분산된 지원정책을 통합한다는 점, 기재부의 지휘를 받는 사회적경제원이 중간지원체계를 통합하도록 한다는 점 등이 주요 핵심으로 제시되고 있다.

추진체계에 있어서는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고, 개별법을 유지하면서 각 법률 간의 이해 조정을 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며, 전달체계로서 사회적경제원을 확대 개편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경제의 행위주체인 현장조직의 경험과 가치, 요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 우려하며, 법률의 제정이 민관 파트너십을 실현하는 것을 통해, 이 법을 통해 실현하고자하는 취지를 충족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다음의 의견을

전달하였다. 다음은 한기협이 새누리당에 제안한 의견 중 공청회 이후 발의안에 반영된 사항 중 일부는 삭제하고, 미반영된 의견을 중심으로 열거하고자 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정의

제2조(정의)

3. “사회적경제조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 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농협, 축협, 수협 및 새마을금고 등은 그간의 운영행태가 자본의 원리로 운영되어 온 점을 감안할 때 사회적경제 정의의 범주로 포함할 경우 사회적경제가 가지는 기본 가치를 훼손할 것이 우려 됨.

▶ 사회적경제조직 정의에 농·축·수·신협 및 새마을금고 등이 포함되기 위해서는 기본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에 맞는 운영방식이 이뤄져야하며, 본 내용에 관한 역할 명시 등이 필요함.

-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경우, 다수 장애인 고용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 이외에 사회적경제조직의 가치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며, 일반적인 영리기업에 해당함. 특히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대기업 계열사에서 운영되고 있는 형태가 많아 사회적경제조직의 범주에 속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이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정의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영리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의 형태로 봐야 할 것임.

▶ 이에 사회적경제조직 정의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관한 조항 삭제 제안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는 보건복지에 관한 국가서비스를 대행하는 조직으로써 본 법안의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에 부합하지 않으며, 경제적 활동이 아닌 복지증진을 위한 공공서

비스 대행기관으로 봐야 함

▶ 이 역시 관련 조항 삭제 제안

2) 대통령 직속 사회적경제위원회

제10조(사회적경제위원회)

- ①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발의안에 요구사항 반영)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 중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수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 가. 사회적경제조직의 근로자, 사용자 등 사회적경제조직을 대표하는 사람
 - 나. 사회적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사회적경제는 민간 주도의 자발성에서 발현된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사회적경제의 자발성을 강화하고 과도한 정부주도성을 제한하며 거버넌스로서의 협력체계가 수립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사회적경제의 민간의 자발성을 보호하고, 지속가능성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민관협력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법안 제정의 취지를 높일 수 있음.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최소한 정부와 민간이 동수이거나 그 이상으로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요구를 한바 있으며 해 발의안에 반영함.
- ▶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규정하는데 있어 행정이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데에 대한 기본 원칙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참고 : 일본의 경우 특정비영리민간단체지원에 법률과 법률에 따른 규칙 등을 제정하면서 10개지 행정지원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음.)

- 제10조 ②항 6호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사회적경제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은 심의 조정의 대상이기 보다 촉진과 지원의 대상이 되어야 함.

▶ 이에 해당 조항의 삭제를 제안

- 법안은 사회적경제원의 역할 및 비중이 막강해짐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제원 지도·감독과 더불어, 심의·조정 등을 하는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사회적경제원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여야 함

▶ 제10조 ②항의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심의·조정 역할에 사회적경제원의 기능·활동·역할에 대한 조항을 삽입할 것을 제안

3) 사회적경제 발전기금

제2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 ①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회적경제에 대한 기금의 운용·관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하게 되어있음.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위원장 또한 정부에 편중된 인원으로 구성될 경우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낮은 상태에서 기금이 운용될 우려가 존재

▶ 따라서 심의위원장을 민간 위촉으로 하고, 심의위원회 구성을 정부와 민간이 적절히 배정된 인원으로 하며, 심의위원회 민간 구성 또한 특정(소수) 사회적경제 부문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함.

4) 운영의 공개

제30조(운영의 공개)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등 사회적경제조직 운영과 관련된 규정
 2. 총회, 이사회 등 주요 의사결정기구의 회의록 또는 의사록
 3. 구성원 명부

4. 회계장부(발의안에서 삭제)

제31조(경영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경제조직 통합정보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등 사회적경제조직 운영과 관련된 규정
2. 총회, 이사회 등 주요 의사결정기구의 회의록 또는 의사록
3. 사업결산 보고서

○ 제30조에서 규정하는 운영의 공개는 사회적경제 운영의 투명성 제고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동의하나, 구성원 명부와 회계장부까지 공개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임

▶ 또한 제30조의 3·4호의 사항을 제외하면 1·2호의 경우에는 제31조와 같은 바, 제30조의 내용에서 3·4호의 사항을 삭제하고, 제31조에 통합하여 내용 정리할 것을 제안.

5) 문구 수정

제3조(기본원칙)

①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여야 한다.

○ 사회적경제조직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여야 하지만, 각각의 개별 주체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고심하여야 할 방법에 대한 문구 삽입이 필요

▶ 제3조(기본원칙) ①항을 “사회적경제조직은 지속가능한 방법을 통해 사회적가치를 실현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

4. 종합 제언

- 사회적경제조직이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큰 틀의 목표에 있어서는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사회적경제조직 자체도 각각 상이한 목적과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 의미와 지원체계를 일원화하는 과정은 충분한 논의와 합의의 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하지만, 이 법안의 제정으로 인하여 사회적경제 부문에 지속가능한 환경 구축을 마련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확장할 수 있다면, 최소한 각각의 사회적경제 부문의 자율성과 지역성을 고려하여 성장기반 문화를 조성해야 함.
- 다만, 현재의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이 사회적경제조직을 관리·통제·감독하는 형태로 지속할 경우,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의 취지에도 어긋날뿐더러 오히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음. 사회적경제원의 역할도 관리·통제·감독의 역할이 과도하게 부여되어 있으므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
- 사회적경제원의 역할로 열거된 사업의 상당부분은 사회적경제조직의 협의체 또는 협력체계를 통해 수행될 수 있는 사업임.
- 사회적경제원은 사회적경제조직간 협력체계를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빅데이터 분석 제공 등과 같은 발전모델의 개발과 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사업에 집중하고, 각 부처간 협력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방향을 재조정하여야 함.
- 또한 사회적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고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정의를 정립하고, 민간 부문을 거버넌스로서 파트너십으로 인정하여 참여를 보장하며, 지원체계를 당사자조직 또는 민간조직을 전문적으로 분화하여 발전하는 형태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할 것을 제안함

- 마지막으로, 지난 사회적경제 기본법 공청회(4월 10일)에서는 발제문을 통해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수요자 중심의 정책), 생태계 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기반 마련,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역차별 해소(금융조달, 조달시장의 입찰에 있어서의 역차별 조항 개선) 등의 지원방식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안 내용은 구성되지 않음. 좀 더 충분한 숙의의 시간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민간과의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통해 내용을 구성해 줄 것을 제안함.